

“세월호 인양 전 특조위 해산 안돼”

이석태 특조위원장, “세월호가 제1의 증거물… 특별법 개정으로 인양 후까지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될”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세월호 참사로 우리 이웃이자 자녀였던 285명이 희생되고 9명은 여전히 찬바닷물 속에서 수습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조위 활동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늘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19일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그 진실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은 모든 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세월호 조사 진상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세월호 특조위의 2015회계년도 예비비는 지난해 8월4일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8월5일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았고, 실제 배정은 8월18일에야 이뤄졌다”며 “특조위 활동 기간일을 법 시행일인 1월1일이 아닌 예비비 의결일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별법이 정하는 18개월의 활동 기간 중 특조위는 이제 막 11개월을 활동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6월30일로 조사가 종료됐고 지난 1일부터는 종합보고서와 백서작성 기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이에 따라 특조위의 정원 60%를 줄인다고 통보하고 실제 12명의 과전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했다”며 “기재부 역시 사업비를 더 집행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활성화 자치현장 토론회 현장 토론회를 가졌다.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승수 전주시장, 도의원, 전주시의원, 관계공무원, 도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이로서 모든 예산 집행은 실질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며 “뿐만 아니라 일부 조사 대상인 공무원들은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종료됐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는 인양되지 못한 채 여전히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다”며 “세월호 침몰 원인을 조사해야 할 특조위가 제1의 증거물인 세월호를 조사하지 못한 채 해산한다는 걸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특조위의 모든

위원과 전 직원들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희생된 분들만 생각하며 활동을 독립적·객관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에 바로 나서주시길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뉴스

정운천, 새누리당도당 위원장 추대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신임 위원장으로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이 추대됐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12일 2016년도 제5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정운천 의원을 신임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 의결했다.

신임 도당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중앙당 혁신비대위의 최종 승인을 거쳐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정운천 신임 도당위원장은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전북을 위한 일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전북도민으로서 긍지를 높이고, 당원 중심의 당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오는 7월 26일 정운천 도당위원장의 취임식을 열고 당내 화합과 전북발전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도당, 전당대회 앞두고 조직정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최규성)은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조직정비에 나섰다.

전북도당은 12일 오후 회의실에서 제16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도당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의결했다.

도당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는 황현 도의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최정자 고문, 양성민 청년위원장, 이해숙·정호영·최현열 대변인, 정호윤 도의원, 김대중 도의원, 한명숙 남원시의원, 안명수 사무처장, 이윤자 다문화국장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8월13일 오펜리웨딩홀에서 열리는 대의원대회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맡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윤태 군산지역위원장으로 두형진 노동위원장, 국주영은 여성위원장, 천진심 전주갑지역위원회 전 사무국장, 권도운 전주병지역위원회 전 사무국장, 홍성진 전 도당 기획국장, 김정숙 전 남원시의원, 송지용 도의원, 이행욱 도당 부위원장, 박인철, 김은영, 김도현, 주정운, 김현섭 당원을 위원으로 15인으로 구성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당위원장과 전주읍과 김제·부안 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전북도당은 도당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내에 1차 회의를 갖고 전주읍과 김제·부안 지역위원장 경선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운영위 회의에는 김춘진·최규성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오경남 노인위원장, 두형진 노동위원장, 양성민 청년위원장, 김현관 장애인위원장, 이명기 직능위원장, 변태성 디지털소통위원장, 전정재 농어민위원장, 국주영은 여성위원장, 지방자치위원장이 참석했다. /신광영 기자

송성환·이학수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의견 청취

전북도의회 송성환 행정자치위원장(전주3)과 이학수 산업경제위원장(정읍2)은 12일 두메산골농농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설명회에 참석, 조례 제정 배경과 발전방향에 대해 소상공인들과 의견을 나눴다.

송성환 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은 물론 사회적 경제 지위향상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여러분의 현신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학수 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평소 송성환 위원장의 관심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송성환·이학수 위원장은 이날 대형마트 입점 반대, 화해 관련 소상공인·농축산 농가 등 김영란법 개정 요구, 최저임금 인상저지 집회 참가 등의 활동내역을 청취했다. /신광영 기자

선거방송토론위 8월26일 '전국대학생토론회'

전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오는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 KT대전인제개발원에서 '제12회 전국대학생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www.debates.go.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150개팀(예비 22개팀 포함)에 한해서 접수받는다.

토론회 첫째 날인 8월 25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주제로 조별 리그전을 통해 64개 팀을 선정하고, 둘째 날에는 '여론조사를 통한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배제'에 대한 주제로 토너먼트전을 통해 결선에 진출할 4개 팀을 선정한다.

준결승과 결승은 9월 3일(예정)에 JTBC 스튜디오에서 실시해 녹화 방영될 예정이며 토론회에 대상 수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상장과 500만원의 부상을 수여한다. 또 금상 등 입상자에게 총 1,46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참가자격, 대회 운영규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www.debates.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박지원 "김수민 영장 기각 사필귀정"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김수민·박선숙 의원의 구속전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박선숙·김수민 두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는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와 우리 당은 처음부터 무리한 조사를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철묵으로 대응하겠다”면서 “거듭 심려를 끼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며 향후 겸손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송급주 수석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에 임해주기를 바라며 우리 당은 남은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수민 박선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새벽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미옥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또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스

이재명 "당대표 출마 이번주 결정"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8·27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 “이번주 안으로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시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광대' 인터뷰에서 “당이나 지지자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너무 오래 고민하면 마치 인지도 상승을 위해서 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빨리 결론 내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전당대회는 아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미래를 어떻게 이끌지 의제를 만드는 일종의 축제”라며 “그런 결정의 과정이어야 하는데 결론이 난 전 당대회처럼 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지도력에 대한 갈망들이 있으니, 아무래도 여의도에 오래 체했던 분들보다는 제가 그 중의 일부는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 당권에 도전한 추미애·송영길 의원을 겨냥했다. /뉴스

이도영 도의원 이번주 행사위 배정될 듯

행사위 최인정 의원이 교육위원회로... 교육위 한명은 환복위로 이동

전북도의회 이도영 도의원(전주2, 국민의당)에 대한 상임위 배정이 이번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도영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 배정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고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이를 따르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최인정 의원(군산3, 국민의당)이 교육위원회로 갈 것으로 의견일치 본 것으로 파악됐다.

최인정 의원은 “이도영 의원의 환복위 배정은 자의 배정이 아니었다. 논란이 있었고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이를 대변해 주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이에 이도영 의원 대신 교육위원회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중 한명

은 환경복지위원회로 이동하게 되며 상임위 배정은 교통정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강영수 부의장(전주4, 더불어민주당)과 조병서 부의장(부안2, 더불어민주당) 중 한명이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번 이도영 의원의 행정자치위원회 지명을 두고도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보다는 교육위원회를 지명했어야 된다는 것이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알짜 상임위원 만큼 선배 의원들에게 양보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보궐로 들어온 만큼 이번 10대 회기에서는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게 앞으로 정치

행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정치인으로 입문한 만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데 맞는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이 의원이 시정생활을 6년 동안 해왔고 짧은 기간이지만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어 문제 없다는 주장이다.

정가 한 관계자는 “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진다. 의원 입장에서는 희망하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는 것은 일종의 행운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의원 스스로 정말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몰아야 되고 만약 잘 할 자신이 있다면 주위에서 아무리 말기불가해도 신경을 필요 없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도교육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도의회 교육위, 도 교육청 첫 업무보고... 이해숙 부위원장 선임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12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의 하반기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교육위는 부위원장으로 이해숙(전주5) 의원을 선임하고, 도교육청의 주요업무가 당초의 사업목표와 추진계획에 따라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해숙 부위원장은 “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요구로 인해 이뤄진다”면서, “이에 하반기 교육위와 교육청,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학교 인력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안교육과정 등 새로운 교육과정이 신설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시책 수립과 교육행정을 당부했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서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 민주주의 실천이기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대책에 더 많은 신경을 써줄 것”을 요구하고, 도교육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김영수(전주4) 의원은 “전북교육의 지표

가 되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만큼, 최근 이슈로 떠오른 소규모학교 폐합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달라”면서 “특히,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 수립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병서(부안2) 의원은 교육부에서 추진한 교과중점학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교육부와 대립각 세우는 것보다는 교과중점학교의 목적을 인정하고,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목표를 접목시키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장명식(고창2) 위원장은 “소통과 화합, 그리고 협치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위가 될 수 있도록 의원력량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를 만들고, 전북교육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피력했다. /신광영 기자

사드 놓고 김종인 우상호 엇박자 김종인,사실상 수용...우상호,결정 과정 문제만 지적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인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간 이견이 또 다시 드러나는 분위기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김종인 대표는 수용 쪽인 반면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김 대표는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 “미군이(사드를) 가져다 놓겠다고 결정하고 (우리

정부와) 협의해놓았다. 우리가 찬성이나 반대나 따져야 할 차이를 넘어서버렸다”며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와 달리 우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던 양면에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만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당내 여론 동향을 살피며 찬반 입장에 명확한 표명을 피하고 있다. 사실상 김 대표와는 시각차가 다른 것이다.

특히 이날 열린 사드 배치와 관련한 더민주 의원 간담회에 우 원내대표는 참석했지만 김 대표는 불참했다. 우 원내대표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당론을 정하려는 자세지만, 김 대표는 사드는 이미 정부가 결정을 끝낸 것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민주주는 국민의당 등 야권의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 요구에 정확한 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뉴스